

“광주천 복원, 자연성 회복에 중점을”

환경단체, 광주시 추진 '아리랑 문화물길 조성사업' 우려 표명
“펌핑수·시설물 등 인위적 조성 아닌 자연·인간 공생 공간으로”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광주천 아리랑 문화물길 조성사업'에 대해 지역 환경단체들이 인위적 요소는 최대한 배제하고 자연성 회복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광주전남녹색연합 등 지역환경단체는 “광주천 아리랑 문화물길 조성사업”은 자연과 인간이 공생할 수 있도록 자연성 회복과 생물다양성 확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25일 주장했다.

“광주천 아리랑 문화물길 사업에 대한 제안” 성명서를 통해 “지난달 광주시가 2021년까지 370억원을 투입해 대대적인

“광주천 환경정비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하지만 이번에 시가 발표한 광주천 환경정비 사업이 펌핑수를 통한 수량 확보, 둔치 내 시설물 설치 등 광주천의 인위적 간섭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간의 광주천 사업이 광주천의 자연성 회복보다 친수기능의 강화에 있었다면 이전과는 다른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자연과 사람의 공생을 위한 ‘광주천 자연성 회복’으로 광주천 사업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광주천 사업의 목적은 자연성

회복과 생물다양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광주천 기본계획이 나와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면서 “광주천을 친수기능과 자연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복원하되 자연성 회복에 조금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두물머리에서 광주시청 뒤편까지 광주천 하류 일부 구간에 대해 시민 이용을 제한하고, 식물 및 야생동물 등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생물다양성 공간으로 시범운영하자”고 제안했다.

광주전남녹색연합은 “펌핑수를 이용해 광주천의 수량을 유지·확보하는 방안은 장기적 방법이 될 수 없다”며 “하천개발부서뿐 아니라 다양한 행정부서와 유관기관이 도시의 지하수위를 높이고 빗물을 활용한 물순환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

이어 “물가에 인접한 산책로를 제방 옆으로 옮겨 사람과 야생동물이 공생하도록 조성해야 한다”며 “잔디광장, 캠핑장, 두물머리 자연학습관 등 둔치 내 시설물 설치의 시민 숙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7일 광주시는 광주천을 생태문화화천으로 탈바꿈시키는 '아리랑 문화물길 조성사업' (광주천 환경정비사업)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이용섭 시장의 공약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2021년까지 총 370억원을 투입, 수량 확보·수질 개선·생태 복원·친수시설 구축 등 단계별로 광주천을 명소로 만드는 게 목적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측량무인기로 해상국립공원 갯벌 조사

국립공원공단 드론 등 활용
고해상도 영상지도 제작

국립공원공단이 드론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해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갯벌 측량 조사에 나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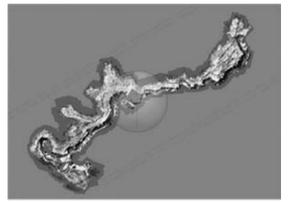
공단은 “올해 6월부터 측량무인기 등 3차원 공간정보 측량 기술을 활용해 갯벌과 해안사구 등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연안지도를 조사한다”고 25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국립공원내 갯벌은 총 93.2km²이고, 이 중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갯벌은 33.4km²로 태안해안국립공원(43.3km²)에 이어 해상국립공원에서 두번째로 넓은 지역이다.

공단은 이번 조사로 고도 100m에서 오차범위 10cm 내의 정밀도로 고해상도 영상지도를 제작할 계획이다.

또한, 측량무인기로 촬영한 고해상도 지형정보를 통해 갯벌 지형 변화를 주기적으로 탐지하고 생태계 변화상을 추적하는데 활용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에 쓰이는 측량무인기는 고해상도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으로 갯벌의 위도, 경도, 높이 등 다양한 위



변산반도 해안선 약 17km 항공사진

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무인기 활용은 2018년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태안해안·변산반도·다도해해상·한려해상 등 해상·해안국립공원의 약 2000km 달하는 해안선에서 조사 중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안전·표시기준 위반 23개 생활화학제품 회수 환경부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했거나 안전 기준 확인·신고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18개 업체 23개 생활화학제품이 회수됐다.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안전 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 중 18개 업체 23개 제품에 대해 정부 조사와 소비자 신고에 따라 회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전체 위반 제품 가운데 접착제 1개 제품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안전 기준(100mg/kg)을 3.4배 초과한 338mg/kg가 검출됐다. 나머지 22개 제품은 접착제, 세제, 코팅제, 방향제 등으로 시장 유통 전에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 및 신고를 하지 않고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지난 25일부터 이들 제품을 ‘위해 상품 판매 차단 시스템’(upss.gs1.kr.org)에 등록해 더는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한국 온라인소평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할 방침이다.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은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줘야 한다.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은 모두 수거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들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모니터링)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안전성 조사를 강화해 국민들의 불안을 줄이는데 주력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국토 대청결운동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환경단체 회원, 시민 등 250여 명은 최근 광주시 광산구 풍영정천 일대에서 '국토 대청결 운동'을 실시한 뒤 기념촬영을 했다.

DMZ 인접 강원·연천 지역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생물권보전지역
제주도 전역으로 확대

DMZ에 인접한 강원·연천 지역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고, 그동안 한라산 중심이던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도 제주도 전역으로 확대됐다.

환경부와 외교부, 국립공원공단은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제31차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계획' 국제조정이사회에서 강원도 정선 지역(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과 경기도 연천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아울러 제주도는 한라산 중심으로 지정된 생물권보전지역의 범위가 갖자왈, 포름, 부속섬인 추자도 등 육상과 해양이 포함된 제주도 전역으로 지정됐다. 생물권보전지역은 우수한 생태계를 보유한 지역을 대상으로 유네스코가 선정하는 3대 보호지

역 중 하나다.

이번 지정으로 국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은 순천, 강원도, 경기도 연천, 제주도, 설악산, 신안도, 광릉, 전복 고창 등 총 8곳으로 늘었다.

환경부는 경기도 파주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비무장지대에 접한 지방자치단체 전체를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여름철 물놀이 때 수영장물 마시지 않게 주의”

영산강환경청 수질 조사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과 관리실태를 조사한다.

영산강환경청은 “한여름 어린이들의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7-8월간 시·도와 합동으로 광주·전남지역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및 시설관리 실태 조사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광주와 전남도는 광주·전남지역에 신고된 물놀이형 수경시설 총 66곳 중 과거 수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이용자가 많은 시설 등을 중심으로 20곳을 선정해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을 이용해 만들어진 바닥분수, 실개천 등과 같은 인공시설물 중 이용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물놀이시설이다.

합동조사에서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운영정지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받는다.

영산강환경청 관계자는 “안전한 물놀이를 즐기기 위해 가급적 수영장 물은 마시면 안되고 침 등 분비물을 뱉지 말아야 한다”며 “안전한 물놀이를 즐기기 위해 이용객들도 주의사항을 잘 지켜 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영산강환경청, 유해 화학물질 취급실태 점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자진신고기간내 신고를 안한 25곳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추진한다.

영산강환경청은 “1년 6개월간의 자진신고기간이 지난 달에 종료됨에 따라 기한 내 영업허가 요건 미 이행 사업장 및 무허가(미신고) 사업장 등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자진신고 제도 후속 조치로 8월 말까지 시행되고, 유해화학물질

무허가(미신고) 수입·불법 유통이 의심되는 사업장(6곳)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중 기한 내 자진신고서 미제출 사업장(19곳)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영산강환경청은 자진신고 유도를 위해 법규 및 환경부 고사·훈령·예규 등이 정해진 자료집과 안내문을 제작해 배포, 설명회 개최 등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벌여 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풍암동, 동부 센트레빌, 근린상가, 매매/임대

- 서구 풍암동 664-6번지, 아파트정문 앞 상가1층 101, 102, 109, 110호
 - 분양평수 50평, 실평수 36평
 - 현재, 대형 할인마트 입점중 (보 8천만원에 월300만원) 임대기간 만료후 월세 100만원 인상가능
 - 매매 - 9억원
 - 임대 - 보5천만원에 월세 400만원
- 문의. 010-6834-7400

